

주간 통일정세

2017-38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9.16	北, 화성 12형 발사 확인...김정은 “핵무력 완성 거의 종착점”(연합뉴스)
	9.17	北 신문 “자력갱생 대진군...누구도 우릴 도와주려 하지 않아”(연합뉴스)
	9.18	北 선전매체, 유튜브 차단되자 계정 다시 신설해 선전물 게시(연합뉴스)
		北 “하나에서 열까지 100% 자급자족할 때”...연일 자력갱생 독려(연합뉴스)
	9.19	北 “제재압박 매달릴수록 핵무력 완성 질주 속도 빨라질 것”(연합뉴스)
	9.19	리용호 北외무상,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行...‘핵실험 정당화할 듯’(연합뉴스)
	9.20	제재 직면 北, 주민에 ‘강한 정신력’ 촉구(연합뉴스)
	9.21	트럼프 보란듯...北김정은, 과수원 둘러보며 “어깨춤 절로난다”(연합뉴스)
		北 “제재로 아동 교육·보건 등도 막대한 지장...즉시 철회돼야”(연합뉴스)
9.22	北 김정은, 트럼프연설에 성명...“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고려”(연합뉴스)	
군사	9.16	北 TV, ‘화성-12’형 발사 영상 공개...TEL에서 바로 발사(연합뉴스)
	9.18	美 항모강습단 10월 한반도 해역서 우리 군과 연합훈련(연합뉴스)
	9.19	네덜란드 軍정보기관 “北, 네덜란드서 WMD 기술·물질 획득시도”(연합뉴스)
	9.21	美 본토 포병부대 한반도전개...서해서 정밀탄 실사격훈련(연합뉴스)
경제	9.16	북한 경제 성장하나...초콜릿·맥주 등 수입 급증(연합뉴스)
사회 문화	9.18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평양서 개막(연합뉴스)
	9.19	北 주재 외교관 “평양 기름값 환율 변동 없다”(연합뉴스)
		北, 제재 강화에도 이달 25~28일 ‘국제상품전람회’ 개최(연합뉴스)
	9.20	北, 평양 외곽서 고구려 벽화무덤 발굴(연합뉴스)
	9.21	평양 개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폐막...北 종합 1위(연합뉴스)
외교 국방	9.16	백악관 “북핵해법 시간 부족해...군사옵션 있다”(연합뉴스)
		EU “北 미사일 발사, 충격적인 도발...대북제재 강화할 것”(연합뉴스)
		유럽 “북한 미사일 도발, 국제안보 위협”...한 목소리 비판(연합뉴스)
	9.17	VOA “쿠웨이트, 北 대사 추방·비자발급 중단”(연합뉴스)
	9.17	쿠웨이트, 北 대사에 “한 달 내 나가라”...외교관계도 격하(연합뉴스)
	9.18	맥매스터 “트럼프 대통령, 북핵 위협 불용...김정은 핵 포기해야”(연합뉴스)
‘우방’ 베트남도 北단천은행 대표 사실상 추방...대북제재 이행(연합뉴스)		

	EU “EU 파견 北 노동자 8월 5일 기준 허용치보다 늘지 않을 것”(연합뉴스)
9.19	“최설희 北외무성 국장-주북 러시아 대사 회담”(연합뉴스) 대북 외교압박 전세계 동참...남미·중동·유럽 ‘北대사 나가’(연합뉴스)
9.20	“美 올해 두 번째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연합뉴스) 트럼프 “완전 파괴” 발언에 이번엔 매티스가 “외교 해결” 언급(연합뉴스) 美 국방 “군사적 옵션 준비해야 하는 현실 깨달아야”(연합뉴스) 中 대학들, 北 6차 핵실험 후 북한 유학생 입학 거부...감시도 강화(연합뉴스) “대만, 北에 유류품 수출·의류 수입 금지”(연합뉴스) 北, 말레이 왕세자에 ‘영공출입권’ 선물...관계개선 러브콜(연합뉴스)
9.21	北 외무상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핵폭주 ‘마이웨이’ 확인(연합뉴스) 로이터 “中중앙은행, 대북 신규 거래 중단 지시”(연합뉴스) 北, ‘도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소송 기각에 맹비난(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9.16	화성-12형 발사 현지지도	리병철, 김정식, 조용원, 유진, 김락겸, 장창하, 전일호	-
9.21	황해남도 과일군 현지지도	황병서, 최룡해, 서홍찬, 김용수, 조용원	-
9.22	미 합중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한 성명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9. 16.

■ 北, 화성 12형 발사 확인...김정은 “핵무력 완성 거의 종착점”(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새벽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임을 확인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16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켜보고 “무제한한 제재봉쇄 속에서도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함.

2017. 9. 21.

■ 트럼프 보린듯...北김정은, 과수원 둘러보며 “어깨춤 절로 난다”(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동지께서 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해에 세상이 부럽도록 희한한 과일 대풍을 안아온 과수의 고장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혹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과일 대풍을 마련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며 과일군혁명사적관, 과일군연혁소개실, 과수연구소 등을 돌아본 뒤 전망대에서 과일군의 전경과 과수 밭들을 바라보면서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을 바라보노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말함.
- 그는 과수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둘러보면서 “이런 것을 보고 땅이 꺼지게 열매가 주렁졌다”고 말한다”면서 “우리 인민들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 대풍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만족감을 표시함.

2017. 9. 22.

■ **北 김정은, 트럼프연설에 성명…“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고려”(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9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전함.
- 김정은은 성명에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함.
- 그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혀 조만간 군사적 행동으로 도발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9. 19.

■ **리용호 北외무상,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行…‘핵실험 정당화할 듯’(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9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고 AP통신과 교도통신이 보도함.
- 리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올해는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가운데 국제 외교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됨.
- 그는 오는 22일(현지시간)로 예상되는 기초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정당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됨.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9. 18.

■ **北 선전매체, 유튜브 차단되자 계정 다시 신설해 선전물 게시(연합뉴스)**

- 북한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에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채널의 기존 계정이 폐쇄당하자 새로운 영문 이름의 계정을 신설해 선전영상을

- 다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 계정에는 18일 오후 3시 현재 105개의 영상이 올라 있고, 구독자 수는 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계정에 게시된 영상들은 ‘우리민족끼리’ 공식 웹사이트에도 연결된 상태임.
 - 앞서 지난 9일 ‘우리민족끼리’ 기존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공지글이 떴는데, 이를 뒤인 11일 계정에 게시된 영상 목록이 다시 정상적으로 보이고 재생도 가능했지만, 이후 다시 계정이 막힌 뒤 현재 기존 계정은 검색 자체가 되지 않고 있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9. 16.

■ 北 신문 “자력갱생 대진군…누구도 우릴 도와주려 하지 않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미국의 제재압박 소동을 단호히 짓밟아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거수기들이 벌이는 반공화국 제재압박 소동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계속 풍지박산(풍비박산)낼 것”이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조선(북한)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이며 투쟁원칙”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주체 조선의 일심단결과 함께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은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힘”이라며 “자력갱생의 대진군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선전함.
- 이어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강대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피로써 지켜낸 자주적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 길뿐”이라고 강조함.

2017. 9. 18.

■ 北 “하나에서 열까지 100% 자급자족할 때”…연일 자력갱생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대응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자력갱생 대진군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자력갱생은 우리 조국의 발전과 비약의 원동력이고 주체 조선의 절대 불변의 전진 방식”이라며 “모두

다 당의 영도 따라 자력갱생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며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자”고 독려함.

- 신문은 “우리에 대한 제재·압살 공세는 그 규모와 내용, 강도와 지속성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이며 위험천만한 민족 멸살 책동”이라고 주장함.

■ 北 “제재압박 매달릴수록 핵무력 완성 질주 속도 빨라질 것”(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8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대조선(대북) 제재 압박 책동에 매달릴수록 국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질주하는 우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함.
-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제재 속에서도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경제강국 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가 제재 따위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75호를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화성-12형)를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제재 이행을 주문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한 뒤 “지금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은 우리의 대외 경제 관계는 물론 인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들까지 전면봉쇄하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의 체도와 정권은 물론 우리 인민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말살하려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함.

2017. 9. 20.

■ 제재 직면 北, 주민에 ‘강한 정신력’ 촉구(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정신력의 강자들을 당할 자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거론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무대를 도용하여 추악한 짓을 일삼고 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을 추호도 놀래울 수 없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 정신, 이는 우리 세대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 징표”라며 “고립·압살·제재 등形形色색의 발악적 책동에 매달리는 온갖 잡것들의 극악한 행위를 쟁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핵 무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전체 인민이 수소탄의 거대한 뇌성을 가장 장쾌한 승전가로 어머니 조국에 드린 핵 과학자·기술자들의 승전고에 대비약, 대혁신의 포성으로 화답하자”라며 각 분야의 성과를 독려함.

■ 北 “제재로 아동 교육·보건 등도 막대한 지장…즉시 철회돼야”(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76차 회의에서 20일 조선(북한)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5차, 6차)에 대한 심의 회의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함.
- 중앙통신은 북한 대표단장이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끈질긴 적대시 정책과 반인륜적인 제재로 말미암아 아동들의 교육 및 보건조건, 생활환경 보장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며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온갖 제재는 무조건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이날 회의에서 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이 아동권리 보호·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과 성과를 평가하고 일련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9. 16.

■ 北 TV, ‘화성-12’형 발사 영상 공개…TEL에서 바로 발사(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5일 실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 영상을 16일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함.
- 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화성-12형의 발사 전후 과정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과 2분 11초 분량의 녹화 영상을 방영했는데, 사진에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화성-12형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에 이어, 차량이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어 해가 뜨고 김 위원장이 참관대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으며 TEL에서 그대로 발사됨.
- 이런 방식은 지난 5월과 8월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때 TEL로 이동한 뒤 분리된 상태로 지상 거치대에 세워 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실전배치 준비가 완료됐음을 보여준 것임.

2017. 9. 19.

■ **네덜란드 軍정보기관 “北, 네덜란드서 WMD 기술·물질 획득시도”(연합뉴스)**

- 북한이 네덜란드에서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려고 했다가 차단당했다고 네덜란드 군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밝힘.
- 네덜란드 군 정보기관인 MIVD의 오노 에이셀세임 국장은 18일(현지시간) AN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는 WMD를 만들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흥미로운 슈퍼마켓”이라면서 “우려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네덜란드에서 WMD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나 물질을 획득하려는 많은 시도를 네덜란드 정보당국이 매년 차단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 WMD 관련 기술과 물질을 획득하려고 했다가 차단된 국가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힘.

나. 한국 및 미국

2017. 9. 18.

■ **美 항모강습단 10월 한반도 해역서 우리 군과 연합훈련(연합뉴스)**

-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가 이달부터 한반도에 전개되어 연합훈련을 함.
- 국방부는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효적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달 중 B-1B 전략폭격기 전개훈련에 이어 이달부터 10월 초 사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10월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항모강습단이 한반도 해역에 전개되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함.

2017. 9. 21.

■ **美 본토 포병부대 한반도전개...서해서 정밀탄 실사격훈련(연합뉴스)**

-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포병부대가 21일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해 적을 정밀타격하는 실사격훈련을 함.
- 주한 미 8군은 이날 “미 8군과 포트 브래그에 있는 미 제18야전포병여단은 오늘 (충남 보령) 대천에서 ‘비상전개 준비태세 연습’을 했다”고 밝혔으며, 포트

브래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육군 기지임.

- 미 8군은 “포병부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해상에 있는 직도를 향해 장거리 정밀탄 실사격훈련을 했다”고 설명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9. 16.

■ 북한 경제 성장하나…초콜릿·맥주 등 수입 급증(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북한이 초콜릿, 맥주 등 사치 식품의 수입을 크게 늘려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초콜릿은 167.9t, 40만 달러어치에 달해 지난해 1분기의 수입량(93.8t, 25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음.
- 지난해 상반기 340만ℓ, 160만 달러어치의 맥주를 중국에서 수입했던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량을 1천200만ℓ, 523만 달러까지 늘렸으며, 알코올 도수 80도 이상의 독주 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400만ℓ, 252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천 560만ℓ, 754만 달러로 급증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9. 18.

■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평양서 개막(연합뉴스)

-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17일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선수권대회에는 조선(북한)을 비롯한 세계 69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면서 “평양 시내 각 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체육인들이 태권도성지관에서부터 개막식 장소인 태권도전당에 이르는 연도에서 대회 참가자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었다”고 전함.
-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7. 9. 19.

■ 北 주재 외교관 “평양 기름값 환율 변동 없다”(연합뉴스)

- 북한의 잇단 도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평양 내 기름값과 환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평양주재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 주유소에서 현재 15kg 단위로 팔리는 휘발유 쿠폰이 24유로(29달러), 디젤유 쿠폰이 25.5유로(31달러)”라며 “지역별로 기름값 차이가 있고 평양 내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평양 주유소 가격은 핵실험 전후 변동이 없다”고 밝힘.
- 이 외교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평양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1kg에 각각 1.6유로(1.92달러)와 1.7유로(2.04달러)로, 현재와 차이가 없는데,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제재 움직임에 따라 북한에서 기름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임.

■ **北, 제재 강화에도 이달 25~28일 '국제상품전람회' 개최(연합뉴스)**

- 최근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달 25~28일 정기 무역박람회인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제1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며 "조선(북한)과 시리아, 중국, 쿠바,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대북(대만)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250여 개 회사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이번 전람회에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 생산한 전자·기계·건설·운수·의학·경공업·식료일용 제품 등이 출품된다며 "여러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교류, 경제적 협조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2017. 9. 20.

■ **北, 평양 외곽서 고구려 벽화무덤 발굴(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평양시 외곽에서 고구려 시기의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최근 평양시 낙랑구역 보성리에서 고구려 벽화무덤이 새로 발굴되었다"며 "지하에 돌로 무덤칸(묘실)을 만들고 흙을 씌운 외칸으로 된 돌 칸흙무덤"이라고 밝혔으며, 길이 300cm, 너비 268cm, 높이 184cm의 무덤칸에는 검은색 안료로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북쪽·동쪽·서쪽 벽의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통신은 설명함.
- 통신은 "북쪽 벽에는 무덤의 주인공과 그의 아내의 것으로 보이는 수레가, 그 아래위로는 창을 든 군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며 "동쪽 벽에는 3열로 구성된 개마무사(고구려 기병) 대열이 형상되어 있으며 서쪽 벽에는 북쪽을 향하여 달리는 말과 건물 같은 것이 그려져 있다"고 소개함.

2017. 9. 21.

■ **평양 개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폐막...北 종합 1위(연합뉴스)**

- 평양에서 열린 국제태권도연맹(ITF) 주최 제20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가 21

- 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지난 17일 개막 후 18~21일 나흘간 진행된 경기에서는 주최국인 북한이 우승컵 3개, 금메달 22개, 은메달 9개, 동메달 4개로 국가별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러시아가 종합순위 2위, 체코가 3위에 올랐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 북한은 남·여 단체전에서도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기술상은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클리멘코(남자)와 북한 리은정(여자)에게 돌아감.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9. 16.

■ 백악관 “북핵해법 시간 부족해…군사옵션 있다”(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재시간)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추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옵션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군사옵션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군사옵션에 대해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막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철저한 제재 이행 노력을 주문했으며,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안보(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며 “모든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2017. 9. 18.

■ 맥매스터 “트럼프 대통령, 북핵 위협 불용…김정은 핵 포기해야”(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우리 시민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으며, 그는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함.

- 그는 현재 대북 옵션 중 하나로 대북 제재를 최대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만, 과거 대북 제재가 분명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북 제재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함.

2017. 9. 20.

■ **“美, 올해 두 번째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연합뉴스)**

-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올해 두 번째 대북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면서 검은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주의보를 내렸다고 RFA는 전함.
-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내려짐.

■ **트럼프 “완전 파괴” 발언에 이번엔 매티스가 “외교 해결” 언급(연합뉴스)**

- 미국 행정부와 군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역할을 바뀌가며 ‘외교적 해결’과 ‘군사 대응’이라는 2가지 카드를 번갈아 내밀며 북한을 압박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최고 수위의 대북 위협 발언을 한 후, 로빈 랜드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GSC) 사령관은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예열 필요도 없다. 준비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고 포린 폴리시가 전함.
-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후 국방부에서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 질문에 “우리는 국제적 절차를 통해 북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美 국방 “군사적 옵션 준비해야 하는 현실 깨달아야”(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시점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힘.
-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공군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에 대해 “여전히 외교적 노력이 (북핵 해법을) 이끌고 있다”며 “국방부는 군사적 옵션을 갖고 이 노력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유엔 총회에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이 최우선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 시점에 우리는 동맹국들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들을 준비해둬야 하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함.

2017. 9. 21.

■ **北 외무상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핵폭주 ‘마이웨이’ 확인(연합뉴스)**

-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개 짚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난함.
- 리용호는 20일(현지시간) 숙소인 맨해튼의 한 호텔에 도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라며 “개 짚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고 주장함.
- 북한 외교관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라는 말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정한 길은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임.

나. 북·중 관계

2017. 9. 20.

■ **中 대학들, 北 6차 핵실험 후 북한 유학생 입학 거부·감시도 강화(연합뉴스)**

- 중국 대학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유학생들의 신규 입학을 거부하는 가하면 기존 유학생들을 상대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중국 대학 입학담당 사정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반발해 북한 유학생들의 입학허가를 제한하고 장학금 신청대상에

서도 제외하고 있다고 전함.

- 베이징 소재 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은 “우리 대학은 북한 학생들의 입학 허가 할당 인원을 줄이고 있으며 특히 물리학과 재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학 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대학 입학 사정관은 모두 “이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어떤 정부 기관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음.

2017. 9. 21.

■ 로이터 “중양은행, 대북 신규 거래 중단 지시”(연합뉴스)

- 중국 중양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 에 통보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로이터통신에 밝힘.
-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일선 은행에 공문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고 현재의 대출 규모도 줄일 것을 지시함.
-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 명성에 금이 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아울러 북한 고객에게 유엔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라고 권고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9. 19.

■ “최설희 北외무성 국장-주북 러시아 대사 회담”(연합뉴스)

- 19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와 최 국장은 전날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주고받고 상호 이해를 증진함.
- 또 이들은 복잡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이런 만남을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함.
- 북한의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 국장과 러시아 대사의 접촉은 최근 러시아가 북핵 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9. 16.

■ EU “北 미사일 발사, 충격적인 도발…대북제재 강화할 것”(연합뉴스)

-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5일 북한이 또다시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도발”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힘.
-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어기고, 주변국과 동북아, 국제사회를 위협했다”고 비판함.
- 그러면서 “EU는 한국과 일본, 동북아 지역과 연대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유럽 “북한 미사일 도발, 국제안보 위협”…한 목소리 비판(연합뉴스)

- 유럽 각국의 정부와 지도자들은 15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충격적인 도발”, “국제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으며, 또 이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에 대한 또 하나의 무모한 위반이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함.
-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은 이웃국가와 국제 항공 및 선박의 항로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으며,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VOA “쿠웨이트, 北 대사 추방·비자발급 중단”(연합뉴스)

- 쿠웨이트가 현직 북한대사를 추방하기로 하고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중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쿠웨이트의 이행보고서에 대북제재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가 포함됐다고 이같이 전함.
- VOA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 등에 따라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대사를 포함해 9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서창식 대사를 포함한 북한 외교관 5명이 쿠웨이트를 떠나게 됐다고 보도함.

■ 쿠웨이트, 北 대사에 “한 달 내 나가라”...외교관계도 격하(연합뉴스)

- 쿠웨이트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한 달 내 떠날 것을 통보했다고 1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쿠웨이트 고위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대사 직무 대행과 외교관 3명 등 모두 4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쿠웨이트는 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2년 내 끝난 뒤 재입국 할 수 없도록 거주증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임.

2017. 9. 18.

■ ‘우방’ 베트남도 北 단천은행 대표 사실상 추방...대북제재 이행(연합뉴스)

-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또다시 추방한 것으로 알려짐.
-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관 신분의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가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중순 북한으로 귀국함.
- 김 대표는 안보리가 지난 6월 2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하면서 자산을 동결하고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린 개인 14명 가운데 한 명임.

■ EU “EU 파견 北 노동자 8월 5일 기준 허용치보다 늘지 않을 것”(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28개 회원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수가 지난 8월 5일 기준으로 허용된 숫자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EU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EU가 회원국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수를 동결했음을 확인한 것임.

-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EU와 북한의 관계(EU-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EU의 대북 제재에 관해 설명하면서 “회원국들이 2017년 8월 5일 기준으로 자국 영토에 허용된 북한 노동자 총수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EU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것을 EU에 적용한 데 따른 것이며,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 몇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2017. 9. 19.

■ 대북 외교압박 전세계 동참...남미·중동·유럽 '北대사 나가'(연합뉴스)

-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사 추방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멕시코와 쿠웨이트 등 남미와 중동에 이어 스페인도 유럽 최초로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함.
-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자국 주재 김혁철 북한 대사에게 오는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함.
- 스페인 외교부는 성명에서 “오늘부로 북한 대사는 ‘외교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됐다”고 밝혔으며, 북핵 문제로 유럽 국가에서 대사 추방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스페인이 처음임.

2017. 9. 20.

■ “대만, 北에 유류품 수출·의류 수입 금지”(연합뉴스)

- 대만 정부가 원유와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산 의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19일 오후부터 대만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정제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통제하는 내용의 대북 독자적 경제제재를 공표·시행함.
-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관련 활동이 지역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함.

■ 北, 말레이 왕세자에 '영공출입권' 선물...관계개선 리브콜(연합뉴스)

- 북한이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의 왕세자인 이스마일 이드리스(33)에게 자국 영공을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선사함.
-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여겨짐.
- 20일 말레이시아 현지 축구단인 '조호르 다룰 타짐 FC'에 따르면 김유성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대사 직무대행은 전날 조호르 주 술탄궁에서 구단주이자 말레이시아축구협회(FAM) 회장인 이스마일을 예방했는데, 김 직무대행은 다음 달 5일 평양에서 열릴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2019 아시안컵 최종 예선전을 앞두고 특사 자격으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9.18	문대통령, 유엔총회참석 출국...한미정상 통화(자유아시아방송)	
	9.19	한미일 육군총장 회담...北 핵·미사일 공조방안 논의(연합뉴스)	
	9.20	"핵잠수함 도입, 한·미 간 이뤄진 합의 없어"(자유아시아방송)	
	9.21	김현중, 워싱턴서 USTR 대표 첫 대면...한미FTA 논의(연합뉴스)	
		주한 미대사 공백 장기화하나...“빅터 차 임명 연내 어려울 듯”(연합뉴스)	
			트럼프 “한국과의 무역협정 바로잡으려 노력”(연합뉴스)
9.22	한·미·일 정상회담...美 대북제재 행정명령 지지 ‘한목소리’(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 회동...‘김정은 성명’ 의견 교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9.17		주미 중대사, 한·일·대만 핵무장론 “불가”...“北석유금수 안돼”(연합뉴스)
	9.20	한중 육군 대표, 양자회담...사드배치 이후 첫 대면(연합뉴스)	

		韓·中 뉴욕서 외교장관회담…한반도 정세 협의(연합뉴스)	
	9.21		
		中외교부 “강경화 장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 밝혀”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9.18		美 “北에 석유 끊어라” 압박에 中 “책임 미루지마라” 반격(연합뉴스)
			中, 美의 대북군사옵션 거론에 반발...“안보리 결의이행이 시급”(연합뉴스)
	9.19	트럼프-시진핑 통화...“北에 유엔 결의이행 통한 최대압박 약속”(연합뉴스)	
		美무역대표부 대표 “中, 세계무역에 전례없는 위협”(연합뉴스)	
		中 “다자무역 수호자” 강조...美의 ‘세계무역위협’ 지적에 반발(연합뉴스)	
	9.20	美동아태소위원장 “中, 한국 대신 북한에 조준 사격해야”(연합뉴스)	中, 트럼프의 ‘김정은=로켓맨’ 조롱에 일침...“어리석은 행동”(연합뉴스)
9.21		中 “트럼프 ‘北 완전파괴’ 발언 韓·中에 심각한 위협” 비판(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9.18	美日 공군도 규슈 상공서 북한 겨냥 무력 시위(연합뉴스)	
	9.20		日, 北남치문제 언급 트럼프 연설에 반색...“日정부 입장 이해”(연합뉴스)
	9.21		아베, UN서 “국제사회 단합해 北압박...‘모든 대북옵션’ 美지지”

		(연합뉴스)	
		"美, 중국 겨냥 지재권 압박에 EU·日 협조 모색"(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9.18		러 의회, 美 정부 대북 군사옵션 발언 강하게 비판(연합뉴스)
		미-러 외교 수장, 뉴욕서 회담... "시리아·우크라 문제 논의"(연합뉴스)	
	9.19		러 "트럼프 제안 유엔개혁 지지 안해"... 美 개혁안에 제동(연합뉴스)
	9.20		러시아, 北 '불량국가'로 지목한 트럼프 연설 비판(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9.18	中, 일본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간섭말라" 경고(연합뉴스)	
	9.21		日, 中과 분쟁지역 센카쿠열도 주소에도 '센카쿠' 명기한다 (연합뉴스)
		中, 아베의 美대북강경론 지지에 반발... "대화·협상이 유일한 길" (연합뉴스)	
	9.22	日中 외교장관 회담서 "北 압박해야" vs "대화도 중요" 대립(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9.18	한반도 긴장속 만주사변일에 중·러 해군 연합훈련 벌이는 이유(연합뉴스)	
	9.19	中-러 외무장관 "북핵문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강조(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9. 18.

■ 문대통령, 유엔총회참석 출국…한미정상 통화(자유아시아방송)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양국 정상은 25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고 도발할수록 몰락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함.

2017. 9. 19.

■ 한미일 육군총장 회담…北 핵·미사일 공조방안 논의(연합뉴스)

- 한미일 3국 육군참모총장은 19일 서울에서 회담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함.
- 육군은 이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차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PACC) 참석차 방한한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육상막료장과 한미일 3군 총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육군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김용우 총장은 미일 총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대북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함.

2017. 9. 20.

■ “핵잠수함 도입, 한·미 간 이뤄진 합의 없어”(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청와대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한·미 당국 차원의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20일 밝힘.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발언함.

- 다만 “한국군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력은 핵 잠수함”이라는 점은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함.

2017. 9. 21.

■ **김현중, 워싱턴서 USTR 대표 첫 대면…한미FTA 논의(연합뉴스)**

-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으로 대면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김현중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USTR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양국의 통상 파트 수장이 처음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외부에 발표할만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그간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 **주한 미대사 공백 장기화하나…“빅터 차 임명 연내 어려울 듯”(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차 교수를 최우선 후보로 올리고 신원 조회와 재무상태 조사 등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임.
- 다만 차 교수의 한 지인은 WP에 “대사 임명은 11월이나 12월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함.

2017. 9. 22.

■ **트럼프 “한국과의 무역협정 바로잡으려 노력”(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우리에게 매우 나쁘고 한국에는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더욱 공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의 초점은 북한 문제라고 덧붙였으며,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많은 방식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한·미·일 정상회담··美 대북제재 행정명령 지지 ‘한목소리’(연합뉴스)

-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따른 공조 방안을 논의함.
- 세 나라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 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조치,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아베 총리 역시 “최근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매우 강력한 조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집행명령도 새로운 차원의 압박을 북한에 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함.

■ 한미 외교장관 회동··‘김정은 성명’ 의견 교환(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에 관한 안보리 장관급 회의 종료 이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했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양 측은 회동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과 함께 북측이 발표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양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 사항이 도출된 만큼 실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외교장관간 협의 등 각급에서의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함.

나. 한·중 관계

2017. 9. 17.

■ 주미 中대사, 한·일·대만 핵무장론 “불가”··“北석유금수 안돼”(연합뉴스)

- 17일 주미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건국 68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한국과 대만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 핵무장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힘.
- 추이 대사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핵무기가 북한에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비판함.
 - 추이 대사는 이어 “핵무기는 지역 정세를 악화할 뿐”이라며 “각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9. 20.

■ **한중 육군 대표, 양자회담…사드배치 이후 첫 대면(연합뉴스)**

- 군 관계자는 20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예정대로 오늘 오전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 회의’(PACC) 행사장인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유하이타오 인민해방군 육군부사령원(중장)과 회담했다”고 밝힘.
- 이번 회담에서 김 총장과 유 부사령원은 사드 배치에 관한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군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다”고 설명함.

2017. 9. 21.

■ **韓·中 뉴욕서 외교장관회담…한반도 정세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함.
-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유엔본부에서 회담함.
-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대북 메시지로 긴장 지수가 더욱 높아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됨.

■ **中외교부 “강경화 장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안 한다’ 밝혀”(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힘.
- 중국 외교부는 21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회담 결과 자료에서 “강 장관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는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또 강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함.

다. 한·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9. 18.

- **美 “북에 석유 끊어라” 압박에 中 “책임 미루지마라” 반격(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한 채 “그들도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원유 대부분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강제노동의 최대 고용주”라고 비판함.
- 이에 추이 주미 중국대사는 15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중국에만 맡겨 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북핵 문제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18일 1면 논평을 빌려 “미국은 중국의 북핵 책임론을 선전하는 게 습관이 됐다.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미국 측의 ‘책임’ 압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함.

- **中, 美의 대북군사옵션 거론에 반발…“안보리 결의이행이 시급”(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군사옵션을 거론한 데 대해

- 중국이 강력히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헤일리 대사의 발언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의 대북문제 대응에 대한 공동 인식이자 의지를 반영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이번 결의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지 또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함.
 - 루 대변인은 “사실상 북핵 문제가 지금 상황에 이르기까지 당사국 간 군사위협을 포함해 말과 행동을 통해 상호 위협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이런 위협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2017. 9. 19.

■ 트럼프-시진핑 통화…“북에 유엔 결의이행 통한 최대압박 약속”(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약속함.
-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은 통화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힘.
-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백악관이 발표한 대북 압박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힘.

■ 美무역대표부 대표 “中, 세계무역에 전례없는 위협”(연합뉴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무역 관행이 세계무역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조금을 주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시장을 왜곡하려는 중국의 조직적인 노력은 세계무역 시스템에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발언함.
-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 중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중국의 저작권 침해, 중국 측 합자회사로의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고 소개함.

■ **中 “다자무역 수호자” 강조…美的 ‘세계무역위협’ 지적에 반발(연합뉴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시장을 왜곡하려는 중국의 무역 관행이 세계무역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양국의 행위가 정당한지는 WTO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다”면서 “중국은 WTO에 가입한 뒤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함.
- 루 대변인은 “중국은 다자무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도록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다자무역 시스템의 수호자이자 건설자, 공헌자이다”라고 주장함.

■ **中, 트럼프의 ‘김정은=로켓맨’ 조롱에 일침…“어리석은 행동”(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 사실을 트위터로 전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19일 관련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별명 짓기를 ‘조롱’이라 표현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글로벌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그의 경쟁자들에게 별명을 붙였던 것처럼 미국 문화에서 별명을 붙이는 것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외국 지도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그의 모든 발언이 이제는 문제가 된다”면서 “그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외교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17. 9. 20.

■ **美동아태소위원장 “中, 한국 대신 북한에 조준 사격해야”(연합뉴스)**

- 미국 의회의 대북 강경파 중 한 명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은 19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비판하면서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이 같은 적대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함.

-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실제로 한국에 대해 보복 작전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며 “중국은 한국 경제에 70억~90억 달러의 비용을 들게 했다”고 지적함.
- 이어 “중국이 이와 똑같은 공격적 접근법을 북한에 취했다면, 우리는 실제로 북한 정권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한국을 조준해 사격하는 대신, 북한을 실제로 조준해 사격할 때가 됐다”고 발언함.

2017. 9. 21.

■ 中 “트럼프 ‘北 완전파괴’ 발언 韓·中에 심각한 위협” 비판(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완전파괴’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과 관련, 중국 외교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중국 주요 매체들이 이 같은 발언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함.
- 이들 매체는 만약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발언이 현실화하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 등이 핵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돼 중국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함.
- 중국 중앙(CC)TV는 21일 아침 뉴스에서 첫 유엔 무대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험담했다고 비판했으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건딜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함.

나. 미·일 관계

2017. 9. 18.

■ 美日 공군도 규슈 상공서 북한 겨냥 무력 시위(연합뉴스)

- 미국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18일 오전 규슈(九州) 주변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함.
-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날 연합훈련 사실을 공개하고, 이번 훈련에 미국 해병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4대도 참가했다고 밝힘.
- 통신은 미군기가 이후 한국 공군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날 훈련은 “한미일 3개국의 연대를 보여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2017. 9. 20.

■ **日, 北남치문제 언급 트럼프 연설에 반색...“日정부 입장 이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환영의 뜻을 표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의 조기해결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다며 환영함.
- 니시무라 부장관은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과제로 다루며 각국에 이해와 협력을 구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가 잘 전달된 결과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함.

2017. 9. 21.

■ **아베, UN서 “국제사회 단합해 北압박...‘모든 대북옵션’ 美 지지”(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을 끝낼 수 있을지는 국제사회의 단합에 달렸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지금 필요한 일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발언함.
-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심각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는 미국의 대북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힘.

■ **“美, 중국 겨냥 지재권 압박에 EU·日 협조 모색”(연합뉴스)**

- 지적재산권(IP) 침해를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1일 보도함.
- 정통한 행정부 고위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여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일본은 물론 EU집행위, EU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함.
- 그러나 EU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조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다. 미·러 관계

2017. 9. 18.

■ 러 의회, 美 정부 대북 군사옵션 발언 강하게 비판(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함.
- 코사체프 위원장은 “군사적 해결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일 어떠한 (대북) 군사 작전이라도 실행되면 북한은 보유한 가능성(핵전력)을 사용할 것이며 이는 역내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아주 슬픈 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 상원 안보·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도 “미국의 위협은 광대극”이라면서 “전쟁은 어린이를 데리고 하는 산책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미·러 외교 수장, 뉴욕서 회담…“시리아·우크라 문제 논의”(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미·러 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이날 저녁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서 약 4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시리아 사태 해결 공조 방안과 중동 및 북(北)아프리카 문제,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 이행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2017. 9. 19.

■ 러 “트럼프 제안 유엔개혁 지지 안 해”…美 개혁안에 제동(연합뉴스)

-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개혁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함.
- 유엔 총회 러시아 대표단원인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개혁) 선언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은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실행하는 것에 가깝다”며 “유엔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막후에서 연합을 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2017. 9. 20.

■ 러시아, 北 ‘불량국가’로 지목한 트럼프 연설 비판(연합뉴스)

-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로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국가’(Rogue Nation)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얘기했다”면서 “우리가 그냥 비난하고 위협하기만 하면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국가들을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러시아는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대화로 이끄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7. 9. 18.

■ 中, 일본에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간섭말라” 경고(연합뉴스)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등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는 것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일본을 향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루 대변인은 “오늘은 9·18 만주사변일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대전 기간 저지른 엄중한 반인류 범죄행위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는 일본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을 겨냥해 “회비 납부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라면서 “중국 은 일본이 역사를 반성한 뒤 위안부 신청 문제를 간섭하지 말고 정확히 다루길 촉구한다”고 주장함.

2017. 9. 21.

■ **日, 中과 분쟁지역 센카쿠열도 주소에도 ‘센카쿠’ 명기한다(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주소에 ‘센카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함.
- 센카쿠열도를 관할하는 오키나와(沖縄)현 이시가키(石垣)시의 나카야마 요시타카(中山義隆) 시장은 센카쿠열도의 행정구역 이름을 ‘도노시로(登野城)’에서 ‘센카쿠’로 변경하는 안을 12월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일본 정부의 국유화 이후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주소에 센카쿠를 명기해 이 지역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中, 아베의 美대북강경론 지지에 반발..“대화 협상이 유일한 길”(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는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이같이 밝힘.
- 루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위해 여전히 단호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과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함.

2017. 9. 22.

■ **日中 외교장관 회담서 “北 압박해야” vs “대화도 중요” 대립(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견해 차이가 뚜렷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22일 보도함.
- 두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력과 대화의 정도에 대해서 이견이 확실하여 고노 외상은 “현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일치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단계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왕 부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압력과 함께 대화도

중요하다”고 주장함.

- 이외에 고노 외상은 중국에서 스파이 등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을 조기 송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왕 부장은 “중국의 법에 기초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함.

마. 중·러 관계

2017. 9. 18.

■ 한반도 긴장속 만주사변일에 중·러 해군 연합훈련 벌이는 이유(연합뉴스)

- 중국군이 중일전쟁 발발 시점으로 보는 18일 만주사변 기념일에 맞춰 러시아 해군과 동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에 들어감.
- 중국군망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해에 진입한 중국 해군 함정들이 이날부터 26일까지 러시아 군함들과 동해와 오희츠크해에서 중러 ‘해상연합-2017’ 2단계 훈련을 시작함.
-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훈련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돼온 양국 해군 훈련인 ‘해상연합’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견제하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관측과 함께 만주사변일을 훈련 기점으로 잡은 점에 비춰 일본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됨.

2017. 9. 19.

■ 中·러 외무장관 “북핵문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강조(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재차 합의함.
- 19일 홍콩 봉황망(鳳凰網)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음.
- 왕 부장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를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마땅히 해야 할 국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화답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9.16	국제적십자 “다음달 덴마크서 대북사업 회의, 북한 관리 4명 참석”(미국의소리)
	9.20	몽골, 북 노동자에 대한 조치 없어(자유아시아방송) HRW “유엔, 북한에 이동 성학대 중단 압박해야”(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9.16	유엔 “영양실조 북 어린이·여성 10년 전보다 악화”(자유아시아방송)
	9.20	카타르 내 북 노동자, 내년 상반기 모두 귀국 전망(자유아시아방송) 北, 무역일꾼들 대북제재로 곤경에 처해(자유아시아방송)
	9.22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 부족량 45만8천t (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9.18	文정부 출범후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9.20	北인권단체 “USB 1천개 담아 北에 풍선 날려”(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9.19	최근 5년간 탈북자 5명 재입북했다 다시 입국해 사법처리(연합뉴스)
대북지원	9.17	정부 “대북인도지원 정해도 시기는 종합적 고려해 결정”(연합뉴스)
	9.18	송영무 “800만달러 대북 인도지원 시기 굉장히 늦출 예정”(연합뉴스)
		통일부 “인도지원은 제재·압박과 별개…국제사회도 마찬가지”(연합뉴스)
	9.21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는 정치와 무관…지원 매우 시급”(연합뉴스)
		미 상원의원들, 한국 정부 대북지원 계획에 “주민들에게 전달될지 의문”(미국의소리)
		대북 인도지원 실제 시기는 추후에…“연내 공여 가능성 커”(연합뉴스)
9.22	조명균 “北정권 제재와 北주민 인도지원 분리가 국제사회 원칙”(연합뉴스)	
9.22	日언론 “美日 정상, 韓에 대북인도지원 신중히 대응해달라 요청”(연합뉴스)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9. 16.

■ 국제적십자 “다음달 덴마크서 대북사업 회의, 북한 관리 4명 참석”(미국의소리)

- 다음달 덴마크에서 열리는 대북사업 관련 회의에 북한 관리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국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건과 식수 등 각종 대북 지원 현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남북 민간 당국 간 접촉 여부가 주목됨.
- 국제적십자사가 다음달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북한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과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함.
- 덴마크 적십자사 대변인실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회의에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관계자 3명과 현지 국제적십자사 관계자 1명 등 4명의 북한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등 9개국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 위원회 ICRC 관계자 등이 참석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 국면 속에서 남북한 민간 당국 간의 접촉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 각국 대표들은 조선적십자회와 벌였던 협력 사업 성과와 문제점, 해결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 9. 20.

■ “몽골, 북 노동자에 대한 조치 없어”(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아직 북한 노동자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유럽과 중동 지역은 물론 중국에서도 입국 사증(VISA) 발급 제한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늘고 있음. 이와 달리 몽골에서는 아직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대북 소식통은 “유엔의 연이은 대북제재에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몽골 당국의 조치는 아직 없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어 “몽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북핵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남북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함.

■ HRW “유엔, 북한에 아동 성학대 중단 압박해야”(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아동의 인권실태를 심의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당국이 성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부국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는 여자 어린이가 성폭력·학대·희롱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강조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탈북자 26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번 심의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 성적 학대 사건 네 건, 그리고 앞서 2000년대 초반에 세 건 등에 관한 증언을 확보함.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들 사건은 북한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성이나 아동 학대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9. 16.

■ 유엔 “영양실조 북 어린이·여성 10년 전보다 악화”(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 부족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10년 전보다 악화됐다고 유엔의 구호기구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힘.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농업개발국제기금(IFAD), 국제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15일 공개됨.
-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등 식량부족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적함.
- 10년 전인 2004년에서 2006년의 영양실조인 북한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35%였는데 2014년에서 2016년에는 열 명의 네 명 꼴인 40%로 증가함.
- 2006년 약 840만 명이었던 영양부족 주민의 수는 2016년 1천30만 명으로 10년 사이 190만 명 늘어남.

2017. 9. 20.

■ 카타르 내 북 노동자, 내년 상반기 모두 귀국 전망(자유아시아방송)

- 쿠웨이트에 이어 카타르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카타르 정부 공보실은 18일 현재 카타르에는 1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으며, 노동계약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안에 대부분 귀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
- 이와 함께, 주로 건설공사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는 다시는 갱신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 같은 카타르 정부의 입장은 최근 쿠웨이트가 자국 내 북한 대사를 추방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수천 명씩 고용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게 대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촉구 압박에 따른 것이란 분석임.
- 카타르 지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언론 보도와 현지 분위기를 보면 올 해 안으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북 무역일꾼들 대북제재로 곤경에 처해(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에 진출한 북한 무역일꾼들이 실적 저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정부의 대북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중국기업들과 북한과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중국 료녕성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18일 “최근 중국에 진출한 조선(북한) 외화별이회사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중국당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측 대방들이 이미 약속한 거래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소식통은 “단둥은 대표적인 북-중무역 중심지여서 가장 많은 북한무역업체가 몰려있는 곳”이라면서 “때문에 중국의 대조선 정책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또 “최근들어 중국회사와 북한 대방과의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서 “중양당이나 군부 소속의 대규모 외화별이 일꾼들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낫지만 개별 기관이나 지방 당 소속 무역회사 간부들은 요즘 밥 값도 없어 중국대방들과 상담도 못 할 지경”이라고 말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9. 18.

■ **文정부 출범후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고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에 대한 협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 대북 인도지원도 북한 인권업무의 범주에 속해 있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음.
-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지만 핵심 의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회의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것임.

2017. 9. 20.

■ **北인권단체 “USB 1천개 담아 北에 풍선 날려”(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가 북한 밖 세계의 자유로운 일상을 담은 USB(휴대용 저장장치) 1천개가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냄.
- 북한인권단체 ‘노체인(No Chain)’ 정광일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북한 인접 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USB 1천개와 성경 일부 내용을 발췌한 전단을 풍선 35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며 “GPS(위치추적장치)로 확인한 결과 이들 풍선들은 모두 금강산 지역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 정 대표는 “올해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은 지난 6월부터 이번이 열 번째”라며 “조만간 풍향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소개함.
- 이 단체가 북한에 보낸 USB에는 북한 밖 외부 세계의 자유로운 일상과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진·영상 등이 담김.

2017. 9. 22.

■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 부족량 45만8천t(미국의소리)**

-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함.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45만8천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함.
-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북한에 비가 적게 내려 관개 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았던 걸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이로 인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고 현재 수확하고 있는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밀과 보리 6만과 감자 25만 등 총 31만t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함. 44만7천t을 수확했던 지난해에 비해 31% 감소한 규모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9. 19

■ 최근 5년간 탈북자 5명 재입북했다 다시 입국해 사법처리(연합뉴스)

- 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해성)씨가 재입북해 북한의 선전 매체에 등장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탈북자 5명이 북한에 되돌아갔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1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탈북민 5명이 북한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 형사처벌을 받음.
- 5명 중 4명은 국내 사회 부적응 문제로 북한에 다시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2013년에 재입국한 탈북자 A씨와 B씨는 북한에서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기도 했다고 통일부는 밝힘.

5. 대북지원

2017. 9. 17.

■ 정부 “대북인도지원 정해도 시기는 종합적 고려해 결정”(연합뉴스)

- 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정부가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됨.

-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임.
- 통상 교추협에 안건으로 올라가면 큰 변동 없이 지원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대북 인도지원의 시기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결과가 주목됨.
- 현재로서는 21일 회의에서 지원 결정만 내린 뒤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국제사회의 대응 상황을 보가며 실제 지원 시기는 추후 정할 것으로 보임.
- 통일부는 17일 참고자료를 통해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2017. 9. 18.

■ 송영무 “800만달러 대북 인도지원 시기 굉장히 늦출 예정”(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함.
-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함.
- 송 장관은 이어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여러 물음에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함.

■ 통일부 “인도지원은 제재·압박과 별개…국제사회도 마찬가지”(연합뉴스)

- 통일부는 18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압박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제재·압박 상황과는 별개”라고 말함.
- 백 대변인은 이어 “제재·압박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 특히 인권상황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이것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이전 역대 정부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덧붙임.
-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를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지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임.

2017. 9. 21.

■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는 정치와 무관…지원 매우 시급”(연합뉴스)**

- 유니세프는 20일 북한 어린이들은 정치와 무관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힘.
- 카린 홀쇼프 유니세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이날 유니세프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함.
- 홀쇼프 소장은 “유니세프는 북한을 포함해 위험에 처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런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함.
- 이어 “어린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북한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임.

■ **미 상원의원들, 한국 정부 대북지원 계획에 “주민들에게 전달될지 의문”(미국의소리)**

-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대북 지원은 전달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지원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함.
- 카딘 의원은 19일 의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대북 지원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지, 혹은 정부를 통함으로써 목적이 변질되거나 정권을 지원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함.

- 특히 북한 주민을 “국가에 의해 희생된 이들”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목적은 북한 주민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함.

■ 대북 인도지원 실제 시기는 추후에...“연내 공여 가능성 커”(연합뉴스)

- 정부가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추후 정하기로 미룬 것은 원칙과 현실이 타협한 결과로 보임.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현실을 고려한 교육지책이라는 의미임.
- 통일부가 지난 14일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직후부터 인도지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발표 시점의 적절성을 놓고 국내외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제기됨.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는 데다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만 이틀 만에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임.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에서도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짐.

■ 조명균 “北정권 제재와 北주민 인도지원 분리가 국제사회 원칙”(연합뉴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밝힘.
-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이렇게 말함.
- 그는 이어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도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조항까지 들어갔다고 소개한 뒤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도 대북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공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2017. 9. 22.

■ **日언론 “美日 정상, 韓에 대북인도지원 신중히 대응해달라 요청”(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미국·일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취약계층 돕기용 800만달러 지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교도통신은 미일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손상할 수 있다며 이같은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함.
- 닛폰TV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론하며 “지금껏 그럴(인도지원을 할) 때인가”라며 난색을 표했다고 전함. 아베 총리와 동행한 소식통은 닛폰TV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냈다”면서 “이것으로 인도지원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함.